

文대통령, 다자외교 데뷔전 비교적 무난

정상간 신뢰 형성에 의미...복잡한 '외교방정식' 여전한 고민

균형외교 강조한 文...한·미·일 삼각공조만 고착화 지적도

4박5일간의 독일 순방을 통한 문재인 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전은 비교적 무난했다는 평가다. 오랜 기간 방치됐던 정상외교를 복원했다는 점은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반면, 우리의 외교역량으로는 바라던 균형외교를 펼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현실인식도 함께한 시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9일(독일 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폐막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끝으로 숨 가뻔던 4박5일의 다자외교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문 대통령은 독일·중국·일본·러시아 등 9개 국가 정상들과의 양자회담과 유엔사무총장 등 정상급 인사들과의 개별 회동 등 외교 강령권을 벌였다.

지난해 10월 이후 단절됐던 각종 정상들과의 적극적인 스킨십을 통해 그동안 제기돼왔던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우려를 어느 정도 잠재웠다는 점에서 이번 독일 순방은 나름의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

꿇렸던 정상간 소통 채널을 급한 대로 복구한 만큼 향후 굳건한 신뢰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연결고리는 확보한 셈이다.

국제사회에 형성됐던 불신을 신뢰로 돌리는 것은 돈으로는 따질 수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6일 오후(현지시간) 한·미·일 정상 만찬이 열리는 주함부르크미국총영사관에서 만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없는 소중한 가치라는 점에서 이번 순방 일정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다. 문 대통령이 이번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시간을 분단위로 쪼개면서까지 가급적 많은 정상들을 만나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는 정상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언급하고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를 당부하는 등 주어진 경제무대를 정치무대로 활

용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한반도 평화구축을 우리 주도로 이끌어 가겠다는 점에 대한 지지도 넓혀나갔다.

비록 G20 정상회의의 공식 정상선언문 안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의장국인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로부터 관련 언급을 이례적으로 이끌어 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문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으로 경제협의체 안에서 이례적으로 정치

적인 메시지의 발신을 관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일본과는 위안부 합의 문제를 둘러싼 여전히 인식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중국·러시아와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이견의 폭을 좁이지 못했다. 이 점에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지리였다.

대북정책을 포함한 남북관계 주도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도 적지 않았다. 균형외교를 표방해온 문 대통령과 달리 오히려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 안으로 더욱 깊숙하게 빨려 들어가게 됐다. 이는 점에 빠진 대북이라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갖는 반대급부로 한·미·일 틀 안으로 들어간 것은 역설적이게도 운신의 폭을 더욱 좁게 만들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미·일 3국 정상이 처음 발표한 공동성명도 북한을 압박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실질적으로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이끄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실리고 있다.

또 미·중·일·러 4강 외교에서 벗어나 외교 다변화를 모색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철학과 달리 독일 순방에서 보여준 행보는 오히려 기존 한반도 주변 4개국을 중시하는 외교관행을 답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김윤호 기자

칼 권 홍준표, 친박 청산 어떻게 나설까

洪, 친홍준표 체제로 입지 다시지...정치적 부담 감내해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세운 3대 혁신과제 중 하나인 인적 쇄신의 칼날이 친박(친박근혜)계를 겨누고 있다.

당시 홍 전 지사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적혁신! 조직혁신! 정책혁신으로 새로운 자유한국당을 만들겠습니다'의 문구가 새겨진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그는 3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혁신위를 구성해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중 가장 강력하게 예고한 것은 인적 쇄신이다.

홍 대표는 대선 직후에도 친박계를 향해 꾸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는 '박근혜 팔아 국회의원 하다가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었고 감옥 가고 나니 슬금슬금 기어 나와 당권이나 차지해보려고 설치기 시작하는 자들 참 가증스럽다'며 친박계와 전면전을 선포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당 대표직에 당선된 직후인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당 쇄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새로운 자유한국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부 혁신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혁신에는 반드시 구세력들의 저항이 따르나 일부 극소수 구박들이 저를 구박한다고 해서 쇄신과 혁신을 멈출 수는 없다'고 밝히면서 친박계 청산을 예고했다.

친박계를 청산하는 유일한 방법론은 당내 윤리위원회를 통한 제명이다. 이는 당헌·당규상 의원총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뉴시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친박계 의원의 힘으로 공천받은 의원이 다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일각에서는 친홍준표 체제를 강화할 통해 친박계를 몰아내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 관측도 한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대화에서 '홍 대표가 자유한국당에 대한 실권을 잡고, 주변이 자기 사람으로 채워진다면(친박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내년 지방선거 때 보수가 살기 위해서는 친박을 청산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당이 바뀌고 있다는 걸 각인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홍 대표가 집어들 메스의 날이 의외로 무딜 수도 있다. 이는 지난 대선 때 홍 대표 대신 지지율 24%에 친박계 지지도 한 몫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홍 대표의 정치적 부담감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친박정신이 그렇게 쉽사리 되지는 못할 것 같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당내 쇄신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감이 상당하기에 홍 대표가 적당히 견제구만 날리다 말 것이라 이야기다.

뉴시스

송영무 임명 지연에 곤혹스러운 한민구 국방장관

국방위 회의서 여야 양쪽 모두에 지적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곤혹스러운 처지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성공 주장이 나오자 국방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한민구 장관은 여야 양쪽 국방위원으로부터 사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느라 진땀을 흘렸다.

한민구 장관은 '북한의 다음 ICBM 발사나 핵실험이 급근에 예상되는데 사드는 언제 도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지켜봐야겠고, 그 과정에서 북한 관련 상황이 있으면

또 정부 나름의 판단과 조치가 있지 않겠나'이라고 대답했다.

한 장관은 이 발언으로 "장관은 소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하라.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도 정부 나름의 판단과 조치가 있지 않겠나"고 남의 이야기 하듯 했다. "장관도 현재 정부다. 정부 자체다. 판단과 의지가 있지 않겠나"라는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지적을 받았다.

한민구 장관은 또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북핵 개발 고도화를 지적하며 '전술핵 배치나 핵 개발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정현 의원의 안보와 국방 관한 포괄적 수준에서의 격정과 정책 재검토 말씀에

대해서 많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나 장성이 청와대 입려 받아서 할 말을 못 하는 건가"라며 한 장관에게 따져붙였다. 이 의원은 "(공감한다고) 자유지만 국방부는 분명하게 의견 개진해야 한다. 그리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고 지적했다.

한민구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이후 지난 5월18일에도 소집된 이 회의에서도 국방위 회의에 참석, 현안보고를 했다. 지난 6일에는 추경 심사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에도 참석했다.

한민구 장관은 지난 5월 사드 보고 누락 사건 때 책임론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 조사 결과, 국방부에서는 위승호 정책실장이 누락의 책임을 지고 직무배제 하는



송영무

한민구

것으로 종결됐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계속되면서 국방부 장관 직을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청와대는 국회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국방위원회는 인사청문 보고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자칫 송 후보자가 낙마라도 한다면 곤혹스런 한 장관의 임기는 그만큼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하태경 '통진당 해산했듯 '극우' 한국당도 해산할 때'

"극좌·극우 발우 막아야"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9일 "저희가 통진당을 해산시켰듯이 종북물이 극우정당인 자유한국당도 이제 해산할 때"라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종북물이 보수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종북과 종북물이 풀 다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양 극단이 작아지고 중간이 커져야

한다"며 "그래서 극좌와 극우의 발우를 막아야 한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극우는 죄를 짓고 동원하는 것이라면, 극좌는 우파를 친일과 동일시하는 세력"이라며 "그래서 극좌를 대표했던 통진당은 이미 해산이 됐고 이미 세력이나 조직으로서 종북은 사라졌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세력으로서의 극우는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한국당"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